

# 정보산업 인력 및 벤처기업 육성에 1천억원 지원

**정** 보통신부가 향후 5년간 44만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되는 정보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기관에 682억원,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의 재교육에 21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배순훈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및 벤처기업이 대학(원)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100억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1천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추가로 지원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위해 배 장관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를 신설해 국가 정보화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효율적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각 부처별 정보화책임자(CIO)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한정된 정보화 재원을 전략부문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정보화 예산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대통령에게 건 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배 장관은 한국 통신을 제외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철저히 규제했던 국내 재벌

이나 대기업들의 통신업체 동일인 지 분 한도를 연내에 완전 폐지하고 내년부터 외국인 지분한도 역시 49%로 확대해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데이콤과 같은 기간통신업체의 주식을 여러사람의 명의로 분산소유했던 국내 기업 들의 주식 소유 현황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식취 매 현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 및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 하기 위해 동일인 지분 제한을 엄격하 게 적용해 유선 10%, 무선 33%의 지분 한도를 설정, 이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으나 이번 보고를 통해 이같은 규정을 완전 폐지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유·무선 각각 올해 33%, 오는 2001년 49%까지 확대하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의 개방 일정을 2년 앞당겨 내년말까지 제한폭을 49%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현재 동일인 3%, 외국인 2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아 래 연내에 한국통신에 대한 경영비전 을 제시한 후 정부 보유주식(71.2%)

을 매각할 계획이다. 외국 기업에 대 해서는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 는 방법을 이용해 주식보유 확대를 유도키로해 정부의 경영권을 계속 고 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 업무보고 주요 내용

### ▲ 정보화에 대한 투자

- 국민 1인 1PC 보급을 유도해 수출 전략품목으로 컴퓨터를 육성한다. 대학·연구소 밀집지역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상, 소프트웨어 산업을 유치해 산·관·학·연 종합 지원체 제를 마련하고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정보문화운동협의회를 결성해 운영.

- 주요 국책사업에 정보화 의무 등 정보화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항 만운영 정보화, 농수산 유통정보화 등에 350억원을 지원.

- 금년 중 청와대·총리실·주요 부처간 전자결재 및 국정상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부처간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 각급 학교에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과목의 교원양 성을 지원한다. 2000년 컴퓨터 연도 표기 문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조해 사



전준비 및 추진실태를 점검해 대처.

▲ 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

- 대학과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에 올해 3,900억원 지원한다. 정보통신부문 총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의 8%에서 2002년까지 30%로 확대.

▲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 2001년 디지털 본방송 개시에 대비, 세부계획을 올해 확정하고 방송기기·콘텐츠 개발 등 방송관련 산업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 포화상태인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고 주파수의 합리적 배정정책을 개발하며 전차사용료 제도, 무선국 허가, 무선기기 검·인증 등 전파이용 규제 완화

▲ 경제난 극복 지원 대책


-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인가제로 완화해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으면 허용해 통신사업의 인수·합병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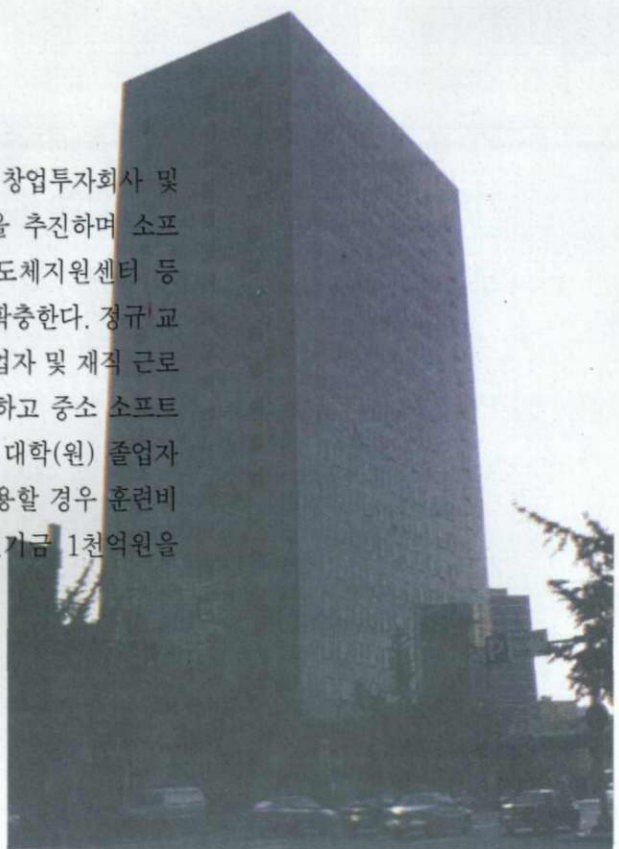
- 통신망 공동활용, 기지국 공동이용 등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위성방송-조기 허가로 투자지원의 효율화 모색.

- 올해 수출178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86억달러를 목표로 하며 오는 2002년에는 수출 353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217억달러 달성 예상.

- 통신사업자와 장비 제조업체의 중남미·동남아시아 공동진출을 지원하고 수출금융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해 자금지원을 원활히 한다. 실리콘밸리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 수

출전진기지로 활용.

- 정보통신 전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소프트웨어와 주문형반도체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규교육기관 지원외에 실업자 및 재직 근로자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및 벤처기업이 대학(원)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훈련비 지원 등 정보화촉진기금 1천억원을 추가 지원. 



## 정부, 2000년 대책위 결성

민·관 13인 참여 - 각 기관 현장점검 착수

정부는 최근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사회 전반의 2000년도 표기문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관이 참여한 범정부조직으로 출범한 대책협의회는 국가전반의 컴퓨터 2000년(Y2k) 문제 해결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 해결활동의 조정, 문제점 해소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대책협의회 구성과 함께 주요 기관의 Y2k문제와 관련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진단의 대상기관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한국은행,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통신, 건설교통부, 포항제철 등 정부부처 및 국가기간산업을 움직이는 핵심기관들이다.

대책협의회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3개조의 진단팀을 구성하고 이달 초까지 주요 기관의 2000년 문제 대응현황을 살펴 볼 예정이며, 지난달 24일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개최한 2000년 문제해결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 6회 가량의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다.